http://dx.doi.org/10.5392/JKCA.2012.12.04.495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방안

Suggestions of Improvements on the Current Academic Journal Evaluation System

오세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Sehee Oh(shoh@inje.ac.kr)

요약

학술지는 단순한 학술정보의 교류수단을 넘어 국가의 학문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31명의 국내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인터넷 서베이)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의 등재절차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향등급으로의 전환 점수를 강화하되 등급유지 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신규 학술지의 진입 평가는 보다 엄격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국내 학술지 인용회수 및 인용지수 적용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정보(KCI)에 기반을 둔 Kor-Factor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에서 발행되는 등재(후부) 학술지의 발행규모(발행종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학술지 평가 | 등재절차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정보(KCI) | Kor-Factor | 공정성 | 합리성 |

Abstract

Journals are the main indicator to evaluate the level of the studies of a count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journal evaluation system to enhance the level of journal quality.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the 631 researchers are surveyed by internet for their recogni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gistration process need to be maintained, however, need to reinforce the conditions to level up the journal level and to extend the term for keeping the rate. Secondly, the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of the appraisers need to be reinforced to increase the equity and rationality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hirdly,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newly entering journal need to be more strict than the current system. Fourthly, the Korean citation index or Kor-Factor need to be applied to evaluate the domestic journals. Lastly, the restriction policy is need to constrain the number of journals.

■ keyword : | Journal | Evaluation | KCI | Kor-Factor | Equity |

I. 서 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연구수준과 연구결과의 관리체제가 좌우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지식정보의 공유, 신속한 확산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연구결과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으로 연구자의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연구재단, 201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접수번호 : #120221-002
접수일자 : 2012년 02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3월 26일
교신저자 : 오세희, e-mail : shoh@inje.ac.kr

해야 한다[7].

학술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의 가장 상용화된 도구 중 하나로 학술지를 꼽을 수 있다. 학술지는 단순히 학술정보의 교류수단을 넘어 국가의 학문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학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학술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술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학술지는 1,920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총 2,052종(등재지 1,432종, 등재후보지 620종)이 있다. 이는 2000년 387종(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비해 약 5배 이상이 되는 수치로 최근 10년 간 학술지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따라 학술지간 변별성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학술지 논문심사 및 게재과정의 부실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11][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엄밀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10][12] 정부차원에서도 학술발전을 위한 학술지 평가제도의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술지 평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학술연구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술지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학술연구의 발전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술지 평가의 의의

학문의 사전적 정의는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지식을 다른 사람과 사물, 기록과 경험, 간접경험으로부터 얻어 배우고 이를 익혀서 체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을 학자(學者)라고 하고, 학문에서 주장 또는 사상, 철학 등을 달리하는 갈래 또는 그러한 학자들의 모임을 학파(學派)라고 한다. 학문의 정립 요건으로는 독자적인 연구대상, 체계화된 연구방법,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집단의 활동이 언급되는데[8] 전문적인 연구집단의 활동은 학술단체의 조직으로 설명된다. 학술단체는 유사한 학문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학문을 교육하는 교육자, 학문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 및 학문적 견해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16]. 따라서 학술단체는 학문발전의 기초단위이며 학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2001년에 도입된 학술지 평가는 비로소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자율적인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평가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나타낸다. 순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학술지 평가는 궁극적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학술단체들이 학술지에 대해 그 동안 갖지 않았던 자체 점검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즉, 학술단체의 자체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학술지의 수준 제고 등 완성도를 높이려는 학술단체의 노력은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학술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학술지 평가는 국내 학술연구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학술지 평가의 역기능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술지 평가는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학술 활동의 생명은 상상력에 바탕을 둔 자유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의 학술지 평가는 자칫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둘째, 계량화된 학술지 평가는 경직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학문발전의 건전한 긴장감 조성과 건강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논의된다[12].

2. 국내 학술지 평가 현황 및 특성

국내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의 수준 향상과 학술활동의 성과 측정 및 연구업적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표 1]은 학술지 평가제 도입 첫 해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

청 및 선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학술지 평가 신청 및 선정결과

연도	신청	선정	선정률(%)
1998	103	58	56.3
1999	303	201	66.3
2000	184	137	74.5
2001	196	149	76.0
2002	209	142	67.9
2003	201	171	85.1
2004	172	152	88.4
2005	176	145	82.4
2006	180	124	68.9
2007	228	135	59.2
2008	218	140	64.2
2009	231	154	66.7
계	2,401	1,708	71.1

출처 : 이광희·이덕우(2010)

2011년 현재, 국내 학술지 평가의 주요 현황을 평가목적, 대상, 방법, 배점, 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평가의 목적은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도입 첫 해인 1998년부터 일관된 것으로, 학술지 평가는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므로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학술지 평가대상은 신규평가와 계속평가로 구분된다. 신규평가는 연구자들 간에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신청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행한 실적이 있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계속평가는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도에 선정된 등재학술지, 2009년도 학술지 평가재심에서 탈락한 등재학술지, 1998년~2008년에 선정된 등재후보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신규평가는 3단계로 자체평가 및 한국연구재단 확인, 온라인 개별심사, 패널합의심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계속평가는 2단계로 패널자체평가 및 재단확인, 패널합의심사로 진행된다. [표 2]는 학술지 평가의 단계별 방법 및 배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신규평가 및 계속평가 단계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 단계	평가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신규 평가	1단계	체제평가	13개	30점	자체평가 및 재단확인
	2단계	주제전문가평가	5개	50점	온라인 개별심사
	3단계	패널평가	6개	20점	패널합의심사
계속 평가	1단계	체제평가	12개	45점	자체평가 및 재단확인
	2단계	패널평가	7개	55점	패널합의심사

출처 : 한국연구재단(2011)

넷째, 신규평가는 24개의 평가항목, 계속평가는 19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3]과 [표 4]는 신규평가와 계속평가의 세부항목 및 배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계속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체제 평가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2.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0	
	3.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제공여부	5	
	4. 논문명, 저자, 초록,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	4	항목 과락
	5.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	2	
	6. 논문 게재율	5	항목 과락
	7.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	항목 과락
	8.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	2	
	9. 논문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6	
	10. 편집위원의 전국성	2	
	11. 편집위원의 중복성	1	
	12. 연구윤리규정 재정여부	1	
	12개 항목	45	배점 과락
패널 평가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10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	5	
	4. 편집위원의 전문성	5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6.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7.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7개 항목	55	배점 과락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1)

표 4. 신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체제 평가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3	
	2.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3	과락 적용
	3.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제공여부	4	
	4. 논문명, 저자, 초록,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	4	과락 적용
	5.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제확정일자 기재여부	2	
	6. 논문 게재율	2	
	7.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	과락 적용
	8. ISSN 부여	1	
	9. 논문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3	
	10. 편집위원의 전국성	2	
	11. 편집위원의 중복성	1	
	12. 연구윤리규정 재정여부	1	
	13. 학술지 역사	1	
	13개 항목	30	배점 과락
주제 전문가 평가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15	
	2. 학술지의 전문성	10	
	3.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10	
	4.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10	
	5.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	5	
	5개 항목	50	배점 과락
패널 평가	1.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	2.5	
	2.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엄정성	2.5	
	3.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성	2.5	
	4. 편집위원회 전문성	2.5	
	5. 투고규정의 구체성	5	
	6.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6개 항목	20	배점 과락

출처 : 한국연구재단(2011)

다섯째, 평가결과는 학술지 등급의 유지, 하락, 탈락을 판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신규평가는 75점 이상인 경우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고, 계속평가는 80점 이상인 경우에 등재학술지로 유지된다. 등재학술지의 경우, 평가결과 연속 2회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재후보지로 하락된다, 등재후보지는 평가결과가 연속 2회 80점 이상이 경우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고, 75.0점에서 79.9점인 경우에는 등재후보지로 유지되며, 연속 2회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재후보지에서 탈락된다.

이상의 현행 학술지 평가 현황을 토대로 한 국내 학술지 평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평가는 집중화된 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분권화된 평가를 수행한다.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의 전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주제전문가 평가 등 부분적인 분권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기관(또는 정부)주도의 평가는 공통의 규칙에 토대를 두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정실주의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지만[17] 한편으로는 정보의 왜곡, 학술활동의 경직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12].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이 적절한 모니터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학술지 평가는 계량화된 지표를 위주로 사용하면서 그 결과는 등급화에 활용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은 양적지표와 질적지표가 혼합되어 있어 두 지표에 배점을 부여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평가항목이 학문분야별 특성과 학술주체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술활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2].

셋째, 획일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우수한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특수성, 학술단체 규모, 활동 주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이는 지나치게 학술지의 외형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술활동의 핵심인 다양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분석

학술지평가는 국내학술지의 수준향상과 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기준마련을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11].

학술지 평가에 관한 국내연구는 평가항목 개발[6], 평가정책 고찰[5], 평가요소[2], 평가모형 개발[19], 지원

사업[7]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학술지 영향력 지수에 따른 학술지의 이용[4], 학술지의 효율적 수집[14] 및 특정분야의 학술지 평가를 위한 기법에 관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21].

한편 외국의 선행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토대를 둔 학회의 위임과정에 관한 연구[22] 등이 있었다.

이러한 학술지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자에 대한 불신, 평가방법의 타당성 결여, 평가항목 및 배점의 불합리성, 등재 기준 점수의 부적절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1]. 실제 학술단체 관련자들은 '현행 학술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평가자의 신뢰성·전문성 24.3%, 평가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22.7%, 평가방법의 타당성 14.2%, 등재 기준 점수의 비합리성 4.5% 순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또한, 평가가 대규모 학회에 맞춰진 점, 질적인 평가 대신 양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는 점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있어 왔다[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일부 및 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학술지 평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업적평가에서 활용되는 학술지와 관련이 깊은 대학 및 학회 관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의 연구방법으로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학술지 및 학회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현행 학술지 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대학교수 6명,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과학기술부 실무자 3명, 학회 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1-2단계를 통해 도출한 학술지 평가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학술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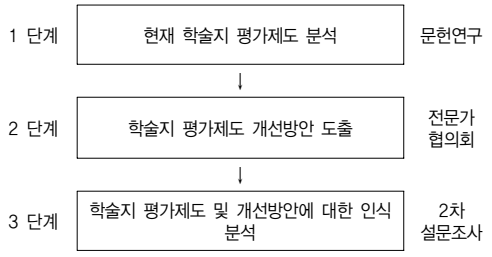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 및 모형

2. 설문조사

설문조사지는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에 관한 것과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는 등재절차, 평가점수,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과정을 포함하였고, 개선방안은 평가방법과 발행규모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은 학회 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표 5]는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631명 중 85.4%인 539명은 남자였으며, 여자의 수는 92명이었다. 2009년 현재 대학 전체 전임교원 중 남성의 비율이 81.0%인 점을 고려하면[20], 표집 과정에서의 편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대 응답자의 수는 70명으로 전체의 1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각각 275명과 286명으로 전체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직급에 따른 분포에서도 연령대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3.7%(276명)는 인문, 사회, 예체능 등을 전공하는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였으며, 자연, 공학, 의약학 등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들은 56.4%(355명)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술단체 내에서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각 단체의 이사 혹은 분과위원(장)이 가장 많았으며(52.3%), 그 다음으로 회장단이29.6%였으며, 일반회원은 18.1%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고, 응답자의

배경변인별(전공분야 및 학술단체 內 역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 2차 설문조사 기술통계 결과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539	85.4
	여자	92	14.6
연령대	20대	7	1.12
	30대	63	9.98
	40대	275	45.6
	50대 이상	286	43.4
직급	조교수 이하	103	16.3
	부교수	155	24.6
	정교수	258	40.9
	연구원	87	13.8
	기타	28	4.4
전공분야	인문사회	276	43.7
	과학기술	355	56.3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187	29.6
	이사 및 분과위원(장)	330	52.3
	일반회원	114	18.1
계		631	100.0

Ⅳ. 연구결과

1. 학술지 평가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

먼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등재절차, 기준 점수, 평가대상 기간, 평가방법의 적절성과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등재절차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학술지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 점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가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우선 신규평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의 76.0%는 현행 신규평가 방법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비율은 24.0%에 그치고 있다. 전공분야에 따른 응답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χ^2 검정 결과에서는 비록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일반회원들은 회장단 및 다른 응답자들과 조금 다른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회원들의 경우 전체의 81.3%가 현재의 신규평가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회장단 및 이사, 분과위원(장) 등은 약 75%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일반회원들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신규 학술지 등재절차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신규 학술지 등재절차의 적절성					χ^2 (유의확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16 (5.9)	57 (20.9)	180 (65.9)	20 (7.3)	273 (100.0)	2.49 (.477)
	과학기술	15 (4.2)	62 (17.6)	244 (69.1)	32 (9.1)	353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6 (3.2)	41 (22.0)	128 (68.8)	11 (5.9)	186 (100.0)	10.72 (.097)
	이사 및 분과위원	22 (6.7)	60 (18.3)	212 (64.6)	34 (10.4)	328 (100.0)	
	일반회원	3 (2.7)	18 (16.1)	84 (75.0)	7 (6.3)	112 (100.0)	
계		31 (5.0)	119 (19.0)	424 (67.7)	52 (8.3)	626 (100.0)	

[표 7]은 현행 신규평가 방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 점수(75점)를 상향 조정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80점 이상이 전체의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85점 이상이 23.2%로 뒤를 이었다. 결국 현행 75점에서 5~10점 정도를 높이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81.9%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계열의 응답자들이 점수를 상향조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회장단의 경우 90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이사 및 분과위원(장)과 일반회원으로 갈수록 보다 상위점수를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반회원으로 갈수록 현행 신규평

가 방법에 보다 긍정적이나,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응답자들만을 놓고 볼 때는 일반회원으로 갈수록 희망하는 상향조정 폭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조정에 앞서 평가항목들이 보다 타당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5].

표 7. 신규 학술지 등재절차 중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 점수의 적절한 수준

(단위: 명, %)

구분		현행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 점수 상향 정도					χ^2 (유의확률)
		8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44 (66.7)	13 (19.7)	7 (10.6)	2 (3.0)	66 (100.0)	3.46 (.326)
	과학기술	37 (51.4)	19 (26.4)	12 (16.7)	4 (5.6)	72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34 (79.1)	9 (20.9)	0 (0.0)	0 (0.0)	43 (100.0)	21.48 (.002)
	이사 및 분과위원	40 (52.6)	18 (23.7)	15 (19.7)	3 (3.9)	76 (100.0)	
	일반회원	7 (36.8)	5 (26.3)	4 (21.1)	3 (15.8)	19 (100.0)	
계		81 (58.7)	32 (23.2)	19 (13.8)	6 (4.3)	138 (100.0)	

표 8. 신규 학술지 등재절차 중 학술지 발행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적절한 수준

(단위: 명, %)

구분		현행 신규평가 시 학술지 발행실적 평가 대상 기간					χ^2 (유의확률)
		4년	5년	6년 이상	기타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16 (24.6)	29 (44.6)	6 (9.2)	14 (21.5)	65 (100.0)	4.78 (.188)
	과학기술	11 (15.1)	46 (63.0)	5 (6.8)	11 (15.1)	73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7 (15.9)	24 (54.5)	2 (4.5)	11 (25.0)	44 (100.0)	7.82 (.252)
	이사 및 분과위원	14 (18.7)	42 (56.0)	9 (12.0)	10 (13.3)	75 (100.0)	
	일반회원	6 (31.6)	9 (47.4)	0 (0.0)	4 (21.1)	19 (100.0)	
계		27 (19.6)	75 (54.3)	11 (8.0)	25 (18.1)	138 (100.0)	

[표 8]은 '3년 이상의 발행실적'을 요구하는 현행 신규평가 기준에 부정적인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상향조정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54.3%가 평가 대상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4년을 택한 응답자들은 19.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전공분야에 따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사회나 과학기술 전공 모두 5년(각각 44.6%, 63.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문사회 전공의 경우 그 비율이 과학기술보다 20% 가량 낮았으며, 4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24.6%로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15.1%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어서 차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계속평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등재후보지의 계속평가 방법 중 등재절차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등재후보지 계속평가 중 등재절차의 적절성					χ^2 (유의확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11 (4.2)	46 (17.5)	179 (68.1)	27 (10.3)	263 (100.0)	1.27 (.736)
	과학기술	10 (2.9)	55 (15.8)	249 (71.3)	35 (10.0)	349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4 (2.2)	33 (18.4)	127 (70.9)	15 (8.4)	179 (100.0)	4.31 (.635)
	이사 및 분과위원	14 (4.4)	52 (16.2)	218 (67.9)	37 (11.5)	321 (100.0)	
	일반회원	3 (2.7)	16 (14.3)	83 (74.1)	10 (8.9)	112 (100.0)	
계		21 (3.4)	101 (16.5)	428 (69.9)	62 (10.1)	612 (100.0)	

전체 응답자의 80.0%는 현재 상태의 등재후보지 평가 방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공분야나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단체 내 역할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회원들(83.0%)이 회장단(79.3%)이나 이사 및 분과위원(장)(79.4%)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등재지의 경우에는 [표 10]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81.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재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보다 1.8% 정도 더 높은 비율이었다. 전공분야나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

할 또한 하위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문사회 전공자나 과학기술 전공자 모두 보기별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응답 비율 또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경향성은 χ^2검정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공분야와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등재지의 계속평가 방법 중 등재절차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등재후보지 계속평가 중 등재절차의 적절성					χ^2 (유의확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13 (4.9)	40 (15.2)	185 (70.1)	26 (9.8)	264 (100.0)	1.76 (.624)
	과학기술	11 (3.1)	48 (13.6)	259 (73.6)	34 (9.7)	352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6 (3.3)	22 (12.2)	137 (76.1)	15 (8.3)	180 (100.0)	4.68 (.585)
	이사 및 분과위원	16 (4.9)	50 (15.3)	225 (69.0)	35 (10.7)	326 (100.0)	
	일반회원	2 (1.8)	16 (14.5)	82 (74.5)	10 (9.1)	110 (100.0)	
계		24 (3.9)	88 (14.3)	444 (72.1)	60 (9.7)	616 (100.0)	

[표 11]은 앞서 살펴본 등재지에 대한 계속평가 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현재 '80점 이상'인 평가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 할 경우 적정 점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90점 이상(35.9%)'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85점 이상(34.0%)' 또한 이와 비슷한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95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은 9.7%에 불과하여 대부분 85~90점 정도로 평가 기준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분야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인문사회 전공자들은 '85점 이상'에, 과학기술 전공자는 '90점 이상'에 조금 더 높은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응답은 회장단은 '85점 이상'에, 이사 및 분과위원(장)들은 '90점 이상'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일반회원들은 85점 이상과 90점 이상을 비슷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다. 즉, 현재의 등재지 계속평가 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반응은 현재의 등재지 유지기준 점수인 80점을 85점 내지 90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등재지의 계속평가 방법 중 등재지 유지 기준 점수의 적절한 변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현행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 점수 상향 정도					χ^2 (유의확률)
		8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	기타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18 (37.5)	15 (31.3)	4 (8.3)	11 (22.9)	48 (100.0)	1.33 (.722)
	과학기술	17 (30.9)	22 (40.0)	6 (10.9)	10 (18.2)	55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13 (48.1)	6 (22.2)	3 (11.1)	5 (18.5)	27 (100.0)	7.93 (.243)
	이사 및 분과위원	15 (25.0)	24 (40.0)	6 (10.0)	15 (25.0)	60 (100.0)	
	일반회원	7 (43.8)	7 (43.8)	1 (6.3)	1 (6.3)	16 (100.0)	
계		35 (34.0)	37 (35.9)	10 (9.7)	21 (20.4)	103 (100.0)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표 12]에서 보듯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의 62.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37.8%는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수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평가 방법 및 배점의 적절성' 수준은 응답자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지향의 문제임에 비해, '현행 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수준'은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당한 심각성을 갖는다. 더욱이 '공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37.8%)는 '평가 방법 및 배점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비율(3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문사회 전공자의 부정적 비율(42.5%)이 과학기술 전공자들(3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응답 경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보기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이들의 답변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할 경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χ^2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별하고 있다.

표 12.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단위: 명, %)

구분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χ^2 (유의확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공분야	인문사회	21 (7.8)	94 (34.8)	140 (51.9)	15 (5.6)	270 (100.0)	6.92 (.075)
	과학기술	18 (5.1)	101 (28.9)	217 (62.0)	14 (4.0)	350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9 (4.9)	57 (31.1)	106 (57.9)	11 (6.0)	183 (100.0)	5.54 (.476)
	이사 및 분과위원	21 (6.4)	103 (31.6)	185 (56.7)	17 (5.2)	326 (100.0)	
	일반회원	9 (8.1)	35 (31.5)	66 (59.5)	1 (0.9)	111 (100.0)	
계		39 (6.3)	195 (31.5)	357 (57.6)	29 (4.7)	620 (100.0)	

표 13.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의 진입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의 진입 어려움						χ^2 (유의확률)
		매우 쉽다	쉬운 편이다	적정하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계	
학술단체	일반	17 (2.9)	131 (22.6)	269 (46.4)	140 (24.1)	23 (4.0)	580 (100.0)	8.88 (.064)
	대학부설	0 (.0)	4 (11.4)	16 (45.7)	15 (42.9)	0 (0.0)	35 (100.0)	
전공분야	인문사회	10 (3.8)	59 (22.3)	119 (45.1)	67 (25.4)	9 (3.4)	264 (100.0)	2.09 (.720)
	과학기술	7 (2.0)	76 (21.7)	166 (47.3)	88 (25.1)	14 (4.0)	351 (100.0)	
학술단체 內 역할	회장단	3 (1.7)	38 (21.0)	87 (48.1)	46 (25.4)	7 (3.9)	181 (100.0)	2.98 (.935)
	이사및 분과위원	11 (3.4)	72 (22.4)	151 (46.9)	77 (23.9)	11 (3.4)	322 (100.0)	
	일반회원	3 (2.7)	25 (22.3)	47 (42.0)	32 (28.6)	5 (4.5)	112 (100.0)	
계		17 (2.8)	135 (22.0)	285 (46.3)	155 (25.2)	23 (3.7)	615 (100.0)	

현행 등재후보지에서 등재학술지로의 진입 과정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표 13]은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의 진입과정의 어려움에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는 현재의 진입 어려움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등재지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응답과 쉬운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28.9%와 24.8%로 비슷한 크기를 보였으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공분야나 학술단체 내 응답자들의 역할에 따른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일반회원들의 경우 33.1%가 등재지로의 진입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회장단 중 29.3%가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반면, 이사 및 분과위원(장)들은 27.3%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른 두 집단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중 평가방법에 대한 관련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학술지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공분야			학술단체 內 역할				계
	인문사회	과학기술	t값 (유의확률)	회장단	이사 및 분과위원	일반회원	F값 (유의확률)	
동일계열 타 학술지 발행기관의 동료평가제 도입	3.29 (1.14)	3.55 (1.06)	−2.97 (.003)	3.27 (1.16)	3.44 (1.10)	3.68 (0.95)	5.00 (.007)	3.44 (1.10)
학술지 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적용	3.40 (1.07)	3.84 (0.90)	−5.46 (.000)	3.59 (0.98)	3.66 (1.01)	3.71 (1.00)	0.55 (.575)	3.65 (1.00)
학술지 평가 심사내용의 반영정도 평가항목에 포함	3.57 (0.92)	3.62 (0.90)	−0.67 (.501)	3.67 (0.83)	3.53 (0.97)	3.68 (0.82)	1.98 (.139)	3.60 (0.91)
게재불가 논문의 이의신청제 운영여부 평가항목에 포함	3.11 (1.10)	3.04 (1.08)	0.81 (.420)	3.09 (1.00)	2.93 (1.11)	3.46 (1.08)	10.18 (.000)	3.07 (1.08)
신규평가 시 주제 전문가 평가 배점(50)의 상향 조정	2.77 (1.00)	2.94 (0.95)	−2.12 (.034)	2.75 (0.94)	2.84 (0.99)	3.12 (0.96)	5.10 (.006)	2.87 (0.98)

신규평가 시 등재후보지 전환기준(75)의 상향조정	2.97 (1.08)	3.14 (1.05)	-1.95 (.051)	3.06 (1.06)	3.02 (1.08)	3.22 (1.00)	1.51 (.221)	3.07 (1.06)
신규평가 시 발행실적 대상기간(3년)의 상향조정	2.97 (1.17)	3.21 (1.06)	-2.68 (.008)	3.09 (1.13)	3.12 (1.13)	3.08 (1.05)	0.07 (.932)	3.10 (1.11)
계속평가 시 등재지 유지기준(80점)의 상향조정	2.79 (1.06)	2.99 (1.02)	-2.38 (.018)	2.81 (1.00)	2.89 (1.07)	3.10 (1.01)	2.68 (.069)	2.91 (1.04)
계속평가 시 주제 전문가 평가 도입	3.06 (1.10)	3.18 (1.02)	-1.35 (.176)	2.98 (1.05)	3.14 (1.08)	3.35 (0.95)	4.22 (.015)	3.13 (1.05)
계속평가 시 등재지 평가주기(2년마다)의 연장	3.60 (1.05)	3.49 (1.04)	1.38 (.170)	3.73 (0.96)	3.47 (1.09)	3.43 (1.01)	4.24 (.015)	3.54 (1.04)
학술지 등급(등재-등재후보-미등재)의 다양화	2.67 (1.23)	2.43 (1.06)	2.57 (.011)	2.65 (1.13)	2.40 (1.14)	2.73 (1.11)	4.77 (.009)	2.53 (1.14)
학술지 평가 가산점제 도입	3.37 (1.18)	3.10 (1.07)	2.90 (.004)	3.30 (1.14)	3.10 (1.14)	3.43 (1.01)	4.12 (.017)	3.22 (1.12)
현장실사의 강화	3.41 (1.07)	3.24 (1.00)	2.06 (.040)	3.33 (1.00)	3.27 (1.07)	3.38 (0.99)	0.50 (.608)	3.31 (1.03)

첫째, '동일계열 타 학술지 발행기관에 의한 동료평가제 도입' 방안은 평균 3.4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들(3.55점)이 인문사회 전공자들(3.29점)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장단(3.27점)과 이사 및 분과위원(장)(3.44점), 일반회원(3.68점)으로 갈수록 점차 평가 결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술지 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적용' 방안(3.65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평가 결과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공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은 이미 인용지수(citation index) 사용에 익숙해 있으며, 이를 통한 연구실적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학술지 평가 심사내용의 충실한 반영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 또한 3.60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공분야나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인 유의미성 검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게재불가 논문의 이의신청제 운영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3.06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단체 내에서 이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응답자들(2.93점) 또한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을 직접 투고하는 일반회원들은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에 보다 긍정적이나, 학회지 운영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회장단(3.09점)이나 이들의 게재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 및 분과위원(장)들(2.93점)은 이의신청 제도에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신규평가시 주제 전문가 평가 배점을 50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평균 2.87점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평가 결과에서 일반회원들의 평가가 3.1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회원들의 경우, 학술지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위치 상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이며, 이후 검토하게 될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 점수의 상향조정'이나 '계속 평가 시 등재지 유지 기준 점수의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흥미롭다.

여섯째, '신규평가시 등재후보지 전환 기준점수를 75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경우 평균 3.07점으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점수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 전공자일수록(3.14점), 일반회원일수록(3.22점) 긍정적인 응답이 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신규평가시 발행실적 평가 대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평균 3.10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3점대 초반의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들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학기술 전공자들(3.21점)은 인문사회 전공자들(2.97점)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여덟째, '계속평가시 등재지 유지 기준을 현행 80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평균 2.91점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전공의 응답자들은 2.99점으로 찬반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경우 2.79점으로 반대 의견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단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차이는 일반회원들과 그 외 응답자들로 반응이 나뉘고 있다. 일반회원들은 등재지 유지 기준 점수의 상향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보다 강한데 반해(3.10점), 회장단(2.81점)과 이사 및 분과위원(장)(2.89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계속평가시 주제 전문가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3.13점)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속평가에서는 주제 전문가 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향후 학술지의 전문성 및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찬성 혹은 반대로 확연히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 평균이 3점대 초반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술지 관련 업무를 책임지도 있는 회장단들은 2.98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술단체의 의사결정이나 논문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 및 분과위원(장)(3.14점)들과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일반회원(3.35점)들은 학술지의 질적 평가 강화를 의미하는 위 개선방안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번째, '계속평가시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등재지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3.54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학계 연구자들이 희망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요구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술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단들의 평가 점수는 평균 3.73점으로 다른 응답자들(이사 및 분과위원(장) 3.47점, 일반회원 3.43점)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열한 번째, '학술지 등급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는 평균 2.53점으로 열 세 개의 개선방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현재 미등재지와 등재후보지, 등재지로 구분하고 있는 학술지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은 제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열두 번째, '학술지 평가 가산점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가 3.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넘어섰으며, 세분화하여 살펴본 배경변인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호 발행이나 학술대회 개최, 심사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신규평가나 계속평가 시 가산점을 제공하자는 의견으로, 인문사회 전공자(3.37점)나 일반회원(3.43점)들의 평가결과가 높았다.

열세 번째, '현장 실사의 강화를 통한 학술지의 질 관리' 강화 방안 또한 긍정적인 반응(3.31점)이 우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학술지 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도입(3.65점)'과 '학술지 평가 심사내용의 반영 정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3.60점)', '계속평가시 등재지 평가주기 연장(3.54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술지 등급의 세분화(2.53점)'나 '신규평가시 주제 전문가 평가 배점의 상향조정(2.87점)', '계속평가 시 등재지 유지 기준의 상향조정(2.91점)' 등은 부정적 견해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발행규모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학문분야별 적정 학술지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학문분야별 적정 학술지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학문분야별 적정 학술지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의견					χ^2 (유의확률)
		절대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	
전공 분야	인문 사회	52 (20.2)	129 (50.0)	61 (23.6)	16 (6.2)	258 (100.0)	20.60 (.000)
	과학 기술	37 (11.0)	143 (42.4)	121 (35.9)	36 (10.7)	337 (100.0)	
학술 단체 內 역할	회장단	27 (15.0)	86 (47.8)	53 (29.4)	14 (7.8)	180 (100.0)	5.76 (.451)
	이사및 분과 위원	51 (16.4)	144 (46.3)	90 (28.9)	26 (8.4)	311 (100.0)	
	일반 회원	11 (10.6)	42 (40.4)	39 (37.5)	12 (11.5)	104 (100.0)	
계		89 (15.0)	272 (45.7)	182 (30.6)	52 (8.7)	595 (100.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문분야별 쿼터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0.7%는 쿼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 수도 15%로 나타났다. 전공분야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반대 비율(53.4%)이 인문사회 전공자들(7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경우 자기들의 학문영역에서 산출되는 학술지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영역별 학술지 쿼터제 시행에는 과학기술 전공자들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반대하고 있었다.

학술단체 내 역할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회원들의 반대 비율(51.0%)이 회장단(62.8%)이나 이사 및 분과위원(장)(62.7%)들보다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회원들의 절반 정도는 학문분야별 쿼터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학술단체 및 학술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장단과 이사 및 분과위원(장)들은 쿼터제 시행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집단의 인식 조사 결과가 향후 학술지 평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등재절차를 유지하면서 전환 점수와 실적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응답결과, 신규평가와 계속평가 모두 '적절하다'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학술지 관련 집단은 전반적으로 현행 등재절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평가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전환 점수의 경우에는 신규평가(현행 75점 이상)는 80점 이상이 58.7%, 85점 이상이 23.2%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82%가 현행 점수보다 5-10점 정도 높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평가의 경우(현행 80점 이상)는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85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34%나 되었다. 또한 신규평가 시 학술지 발행실적 평가대상 기간은 현재의 3년에서 5년(54.3%)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전공분야별로 살펴보아도 인문사회 응답자의 약 45%, 과학기술 응답자의 약 63%가 5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상의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행 등재절차의 틀은 유지하되 전환점수와 평가기간(신규평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학술지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준이다[19].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2%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약 38%는 공정성과 합리성 수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공정성과 합리성은 제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현행 학술지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한 항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즉, 현행 학술지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평가자의 신뢰성(24.3%)과 평가자의 전문성(21.6%)을 지적하였다. 이는 평가방법의 타

당성(14.2%)과 평가항목의 부적절성(12.5%) 보다 높은 비율로써 평가자 선정 방식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학술지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동료평가제(peer review)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학술지의 진입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의 진입이나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진입하는 것의 어려움 정도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회원보다 관련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장단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과학기술분야보다 인문사회분야의 응답자가 어렵다고 느끼며, 일반 학술단체보다 대학부설 학술단체가 더 어려움의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등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등재 및 등재후보지의 퇴출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현재의 퇴출 과정이 충분히 엄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36%는 엄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출입과정의 엄격성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만큼 현재보다 진출입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현행 학술지 평가의 개선방안으로 평가방법별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 동일계열 타 학술지 발행기관에 의한 동료평가제 도입, 학술지 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적용 방안, 학술지 평가 심사 내용의 충실한 반영 정도의 도입, 게재불가 논문의 이의신청제 운영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반면 학술지 등급의 다양화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평가 방법이다[15]. 그런데 평가방법별 배점에 관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신규평가는 패널심사 비중을 낮추고 체제평가와 주제전문가 평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계속평가는 체제평가와 패널심사의 비중을 낮추면서 현재 면제되어 있는 주제전문가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세부 평가항목으로 학술지 평가내용의 반영정도 포함, 게재불가 논문의 이의신청제 운영여부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편 '학술지 인용횟수 및 인용지수 적용(평균 3.65)'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국내 학술지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여 학술지 평가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3]. 현재 2008년 DB까지 정리된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정보(KCI, Korea Citation Index)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KCI에 기반을 둔 Kor-Factor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Kor-Factor는 단순히 피인용횟수만을 활용하는 Impact Factor의 내재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신규로 개발한 학술지 평가지표로서 복합지표화를 통한 피인용 횟수 의존도를 개선하고 변별력을 향상한 장점이 있다[1].

또한 '현장실사를 강화(평균 3.31)'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응답자들은 현행 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장실사에 대한 요구는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하여 향후 연구재단에서는 학술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등재(후보) 학술지의 발행규모를 학문분야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인문영역(3.95)과 사회영역(4.0)의 학술지는 발행 종수가 적정수준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분야(2.94)는 현재보다 발행 종수를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예술체육(3.55)이나 의약학분야(3.52)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 3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 종수는 다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분야는 발행 종수를 현재보다 다소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학술지 질 관리를 위해서 발행기관당 한 개의 학술지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57.4%)이 반대의견(42.6%)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찬반이 팽팽한만큼 발행기관별로 발행종수를 엄격히 규제하기 보다는 심사방

법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및 심사자의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은 학문분야별 적정 학술지 수를 제한하려는 쿼터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61%가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단 심사기준을 통과한 학술지에 대해서는 모두 등재(후보)지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참 고 문 헌

[1]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지평가 개선 보도자료*", 2010.

[2] 김신령, *대학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분석*,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3.

[3] 김재춘, "학술지의 발간·관리현황 및 발전방향 탐색",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집, 2011.

[4] 김환민, 김재훈, 정도헌, "학술지 영향력지수와 전자 학술지 이용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 pp.40-44, 2007.

[5] 박재신, 김근세, "*학술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6] 박홍석, "*학술지 평가의 배경, 사례 및 평가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7] 백종섭, "*국내외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8] 송광용, "제38대 학회운영 기조",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103호, 2010.

[9] 오세희,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10] 이광희, 이덕우, "온라인 학술지 동향과 학술지 평가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 pp.1728-1741, 2010.

[11] 이덕우, *국내 학회 지원사업 현실화 방안과 학술지 평가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6.

[12] 이종우, "학술지 평가를 말한다.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영미문학연구회, No.15, pp.308-325, 2003.

[13] 이창수, 김신영, "학술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Vol.15, pp.67-93, 2003.

[14] 이혜진, "학술지 수집을 위한 종합목록 활용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 pp.371-375, 2007.

[15] 장덕현,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1, pp.359-376, 2004.

[16] 장선영, "*국내 학술단체 연구활동 조사,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17] 정태인, "*대학의 교수업적 평가 및 학술지 평가 제도화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2000.

[18]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및 KCI 시스템 소개", 2010

[19] 한상완, 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3, No.2, pp.89-118, 1999.

[20] 황구연, "*2009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0.

[21] 황혜경, 유수현, 최호남, 최희윤, 남기홍, "체크리스트기법을 사용한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평가",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 pp.339-342, 2007.

[22] T. Saafeld, "Members of Parliament and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Agency relations and problems of oversigh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37, pp.353-376, 2000.

[23] http://www/nrf.re.kr

저 자 소 개

오 세 희(Sehee Oh) 정회원

- 1991년 2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8년 2월 : Univ. of Wisconsin-Madison 행정학(M.A.)
- 2008년 2월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인사행정